

# 걸으론 “야권연대” 속으론 “질까봐서”

■ 민주, 노원 병 무공천 배경엔

승리 가능성 낮아 ‘어쩔 수 없는 선택’

“공당 무책임” “조건없는 결정” 비판도

민주통합당이 25일 서울 노원 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표면적으로 야권연대 정신을 살려간다는 것이다.

노원 병은 작년 총선 당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으로 애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 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4명이나 후보가 나을 수 밖에 없어 애원연대가 사실상 폐기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애원의 맘들이 스스로 희생, 박근혜 정부에서도 애원의 협조와 연대 불씨를 살려 가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의원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뤄준 안 전 교수와 진보정의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고 경종을 울리려면 범야권의 결집과 연대가 절실히”며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위와 이번 선거에서 애원 후보가 승리해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 안전 교수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후폭풍이 만만찮고, 안 전 교수와 패배해도 애원분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선 일정 부분 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공천은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 하더라도 이번 재보선에서의 희생을 지렛대 삼아 안 전 교수와의 연대 여지를 최대한 열어두고 애원의 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공천 결정이 안 전 교수와의 거리를 좁히거나 애원연대 정신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 교수는 무공천 결론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별다른 평가 없이 “새 정치의 길에서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는 것은 바람

직하다”는 원론적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실제로 민주당은 안 전 교수와 애원연대나 협력에 대한 교감 없이 무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이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기에 진보정의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무공천이 실질적으로 안 전 후보 도와주기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트위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뜻을 계승하고 노원의 승리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완주 선언이라는 것이 진보정의당의 설명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안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어쩌다 민주당이 후보

도 못 내게 됐느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지도부가 안 전 교수에게 진 부채, 범야권 결집, 새누리당 후보의 어부지리 등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하지만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식의 무공천은 이번에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도전 나선 이용섭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낡은 지역주의 타파해야”

민주통합당의 5·4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이용섭 의원은 25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TIK(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천혁명’을 발표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부겸 전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훌륭한 인재들이 낡은 지역주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각자의 불모지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나간다면 지역주의 완화는 물론

양심과 가치에 입각한 정치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과와 돈이 없어도 도덕성과 능력만 있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공천혁신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공천혁명이야말로 민주당 혁신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천룰이 불분명하고 자주 바뀌면 그 틈새에 계파나 돈이 침투한다”며 공천기준과 경선룰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공천 기준은 적어도 1년 전에, 공직후보는 60일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 빛이 없고, 혁신과 약속을 생명줄로 여기는 저야말로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 혁신의 요체인 공천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격전지 노원 병

4·24 재보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최대 격전지인 서울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25일 지역주민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한 히루를 보냈다. 노인장을 찾아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왼쪽부터). 노원경찰서를 방문한 안철수 후보. 남편인 노회찬 전 의원 등과 함께 선대위 봉족식을 가진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연합뉴스

## 민주 당권주자 공방전 가열

김한길 “범주류 패권적 정당 운영 선거패배 자초”

강기정 “비주류 당대표 교체는 혁신에 도움 안돼”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들 간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은 당권을 잡은 친노(친노무현)와 주류 등 범주류의 패권적 정당 운영이 작년 총·대선 패배로 이어졌다며 주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범주류 당권 주자들은 ‘비주류 대표론’이야말로 또 다른 패권주의 사고라며 민주당의 혁신을 제대로 이행할 ‘혁신형 대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순석희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작년 총선 패배 후 반성하고 변화를 했어야하는데 오히려 ‘주류가’ 담합으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대선까지 주도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이번 대선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패배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주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여론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다는 것”이라며 “정당 민주주의 왜곡

의 중요한 지점에 패권이 있었다. 이를 극복해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인적 교체’ 필요성을 거론했다.

범주류 후보로 분류되는 강기정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의 범주류가 (비주류인) 김 의원으로 교체되는 것을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패권적 발상”이라며 “주류 대 비주류의 구도는 당시의 혁신에 제일 도움이 되지 않는 구도”라고 받아쳤다.

범주류의 연대 가능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점차 치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이나 비

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 의원도 “같은 광주에서 후보가 2명이나 나온다는 것은 지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 의원과의 단일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주류가 뭉쳐서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국민이 보면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김한길 하나 잡겠다고 민주당이라는 초가삼간을 터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추 의원이 주류 층 주자들과의 연대와 단일화를 이룬다면 김한길 의원의 한 판 승부가 가능한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이번 주 까지 당권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누드검색’ 심재철 의원

민주당, 징계 촉구

민주통합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종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특위는 국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심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여성의원 23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성 접대 의혹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때에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무시되는 상황에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내정자 청문회 ‘2라운드’

최문기 미래부·윤진숙 해수 장관·이경재 방통위장 등

민주 “채동욱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 ‘빅3’ 철저한 검증”

새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회 ‘2라운드’가 25일 시작됐다.

새 정부의 국무위원 17명 가운데 15명이 임명된 가운데 정부조직법 통과로 지명됐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다. 24일 내정 발표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늦게 인선됐던 김덕중 국세청장, 채동욱 검찰총장(4월2일), 이상한 경찰청장(27일) 내정자 등 이른바 사정기관 ‘빅3’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이날 김 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차례로 실시된다.

박한철 현법재판소장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절반 이상이 끝났지만, 정부와의 ‘부실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터여서 청문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제1라운드’에서는 김종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인 재판증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 것 솔로몬과 함께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80만 원 (추가임대수익증액 매매가 7억8천원 1억6천만 원)

◆상가매매◆

• 신용동 첨단지구 110㎡ 월수익 400만 원 매매가 8억5천 원 (5천만 원자본금 1억5천만 원 이동통신점 입점예정)

• 신용동 첨단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중층입구처 대로변 코너건물 혼수상점 매매액 1억 원

◆분양◆

• 유통동 첨단지구 110㎡ 1층 대형매장 1층 48㎡ (단지독점형 상권) 2층 44㎡(1층 48㎡) 매매가 1억6천만 원

• 유통동 첨단지구 110㎡ 1층 대형매장 1층 48㎡ (단지독점형 상권) 2층 44㎡(1층 48㎡) 매매가 1억6천만 원

• 유통동 첨단지구 110㎡ 1층 대형매장 1층 48㎡ (단지독점형 상권) 2층 44㎡(1층 48㎡) 매매가 1억6천만 원